

전남도, 친환경 항공기 전기추진 인증 허브 ‘도약’

고흥서 국내 첫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착공 우주·드론·항공동력 잇는 ‘트리플 거점’ 본격화

전남도가 국내 첫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 추진시스템 인증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며 미래 항공산업 전환기를 선점했다. 전남도는 3일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축에 나섰다. 착공식에는 양국진 고흥부군수를 비롯해 정태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원장, 김덕관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센터장, 강지훈 전남대 기획연구본부장, 김병성 전남도 우주신산업과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항공업계는 탄소중립 전환의 압력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무공해 항공기만 운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친환경 동력체계는 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항공기 핵심부품을 국제 기준에 맞춰 검증할 통합 인증시설이 전무해 기업

들이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해야 했다. 전남도가 착공한 평가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고 국내 기업의 개발·시험·인증·표준화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구축된다. 196억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1650㎡ 규모의 실험동에 이차전지, 전기동력계, 비행모사, 다축추력, 아이언버드 등 5개 핵심 평가장비를 갖추게 된다. 시험·평가 체계는 다기관 협업 구조로

운영된다. KCL은 국가공인 인증과 국제 표준화 절차를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전남대는 글로벌 전문기관과의 기술협력, KAIST·서울대 등과의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맡아 기술지도·시험평가·시제품 제작 등을 기업에 지원한다. 국내 친환경 항공동력 분야의 표준 확립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고흥은 우주발사체(나로우주센터)와 드론 시험평가 기반에 더해 친환경

항공동력 분야까지 확보하며 ‘우주·드론·친환경 항공’의 삼각축을 모두 갖춘 국가급 항공우주 산업지대로 영역을 넓히게 됐다. 김병성 전남도 우주신산업과장은 “평가센터는 전기추진시스템의 성능 검증과 인증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전남이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표준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좌담회서 구호 외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손뼉맞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 “내란 진상규명·단호한 처벌 시급”

12·3 비상계엄 1주년, 민주·진보·정의당 등 성명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촉구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12·3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임헌주의에 충구를 겨눈 국헌문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이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내란 재판을 담당한 자꾸 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불공정한 재판과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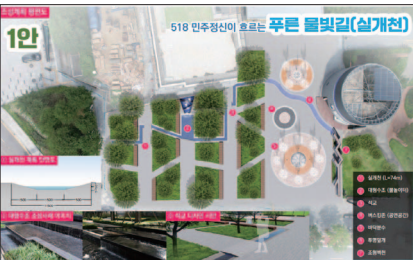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사태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제자리결음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완”이라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2024년 12월 3일은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렸던 날이자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 교체에 이르게 되었지만, 당시의 반헌법적 시도에 대한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정의로부터 멀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연

시키는 조희대 사법부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법부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덮는 도구가 된다면 국민은 이를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제2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1980년 광주였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건강한 경쟁으로 광주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불법 계엄 1년, 시민 저항 1주년을 맞아 광장은 다시 묻는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시킨 낡은 정치의 종언은 바로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며, 정의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사력을 이용한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亞문화전당 실개천 조성’ 본격

내일 전일빌딩245서 주민설명회…물길 위치 등 공유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 공원 주변에 도심 물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 한다. 광주시는 5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8층 다목적강당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조성’은 아시아 문화전당 회화나무 공원 주변에 도심 물길을 조성해 아시아문화전당과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억원(국비 15억원·시비 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4년 실개천 우수현장을 시찰하고 유출지하수 국고보조사업에 당선돼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확보했다. 2026년 6월까지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공사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실개천 위치(안)를 공개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평면도

한다. 광주시는 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광주는(ON)’에서 실시한 ‘아시아문화전당에 작은 물길이 생긴다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586명 가운데 77.1%가 실개천 조성에 찬성했으며, 73.6%는 조성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광주시는 주민설명회 이후 회화나무공원과 시청 일원에서 실개천 위치 선호도 조사를 투표 및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시의회, 광주교통공사 사장 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문석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후보자는 재무관리 전문으로서 공사의 고질적인 재정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술 기반 신사업 개척, 요금 현실화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철도 전문성에 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2호선과 관련된 구조적

확장 불가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적자 규모, 현실화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판단했다. 시철의 위원장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충실하게 임했으며, 향후 인사청문 후보자가 갖춰야 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면서 “광주교통공사 사장을 맡게 된다면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광주시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

시민이 뽑은 올해의 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3’

설문·현장평가·심사 등 1만3000명 참여

이번에 발표된 10개 후보 정책은 지난 4월 온라인 설문조사(6040명)를 시작으로, 5월 광주시민의 날 현장평가(1409명), 9~10월 지역사회 리더 대상 설문조사(4830명)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정책들이다. 경진대회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330여명의 시민·전문가 평가단 앞에서 각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직접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가운데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3’가 올해의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시작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3년 차를 맞아 기존 생활돌봄에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진화했다. 방문간호, 방문구강교육을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통해 방문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2위 통합건강센터와 광주형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한 ‘광주형 공공의료’, 3위 AX실증밸리 조성 등 ‘AI 중심 도시 광주’, 4위 ‘국가 제2호 거점동물원 유치공원 조성’, 5위 광천터미널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6위 ‘시원한 도시 조성’, 7위 ‘광주천 환경개선’, 8위 ‘군공항 이전’, 9위 ‘복합쇼핑몰’, 10위 ‘대자보 도시’ 등이 순위에 올랐다.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질적 성과가 확인된 정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 정책으로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삼삼오오 이웃돌봄’이 선정됐다. 이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관광 상품화 융합으로 광주다움 확산’,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 복지 모델 ‘광주문화누리카드’가 우수정책으로 뽑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광주시민들이 올해를 빛낸 최고의 정책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3’를 선택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스타정책 경진대회에서 ‘시즌1’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광주시는 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시민평가단의 현장심사를 통해 ‘올해의 베스트 10 정책’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기존의 연말 1회 직원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주체인 시민이 후보 선정부터 심사가 거친 과정에 참여하는 ‘연중 시민중심 평가제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